제343회국회 (임시회·폐회중)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6년7월11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
- 2.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5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 제5차 국방위 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 했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사안의 중대 성을 감안해서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소집되 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 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도발행위가 대한민국 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 다.

북으로부터 수시로 도발위협을 받고 있는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 계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7월 9 일에도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무수단 시험 발사에 이어 SLBM 시험 발사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 반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 하고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해소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드 배치에 관한 관심과 걱정을 여러 차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그 배경에서부터 사드 의 군사적 효용성과 운용주체 및 비용문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 건강문제, 중국 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의 현안보고와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 시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

(14시08분)

○위원장 김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드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미 정부의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 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 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 사일 도발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 라와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미사일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사드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보장하는 가운데 운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만을 기준 으로 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올립니 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

고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한미 정부가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협의 경과, 배 치 결정 발표, 향후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금년 2월 7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개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문에는 증대하는 북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의 향상 조치이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래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군사적 효용성,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후보지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운영결과보고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장 서명 후 국방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7월 8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배경입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발사 등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조기 배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간 공동으로 인식하였고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유관부처 간 협의와 NSC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전에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보고서를 서명 하게 되면 배치부지의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 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방 부 출입기자 풀을 구성하여 괌의 사드 포대기지 를 현장 취재토록 미 측과 협조하여 지원하겠습 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 한 자위권적 조치로서 국민의 안전 · 건강 · 환경 을 보장토록 부지를 선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 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호 위원** 장관님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정부질문 때 '모 언론보 도를 보고 부지가 결정된 바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저도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 게 답변드렸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때는 이미 사드 배치가 결정돼 있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는 오늘 방금 보 고드린 것처럼……
- ○우상호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보세 요.

그때 5일 날 대정부질의 답변하실 때 사드 배 치는 결정돼 있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는 7월 7일 NSC 상임회의를 통해서 배치가 결정……
-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7일 날 최종 결정한 것 이지요? 7일 날 NSC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지 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5일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었는데 7일 날 결정한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의 마지막으로서 NSC를 한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면 이 결정과정에서 미국과 의 협상채널은 국방채널이었습니까, 외교채널이 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국방채널입니다.

- 국방채널입니까? 외교부장관은 ○우상호 위원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은 이 문제를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면 국방채널에서는 언제쯤 결정했습니까, 이걸? NSC 차원의 결정은 7일이 라 치고 국방채널에서는 언제 결정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6월 말쯤에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고 우리가 7월 초쯤 에는 이것은 배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면 6월쯤에는 부지가 결정됐 다는 얘기네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는 아직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6월쯤에는 부지 가용성을……
-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용성을 확인했다고······
- ○**우상호 위원** 가용성을 확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부지에 사드를 배치……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여러 부지를 검 토하였는데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부지를 자기 들이 판단했다, 확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요? 사드를 배치할 만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는 데 6월쯤에는 이 정도 부지면 사드를 배치할 만 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그때부터 결정에 가까운 협의가 시작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부지 가용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배치를 할 수 있 다는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나 그 말 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 과정을 좀 더 정 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 결정은 7일 날 NSC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렸지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셔 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할지, 이것 데려오면 위험한지 안 한지 이런 검토를 국방 담당자로서 는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6월 말쯤에는 부 지 가용성이 확인되었으니까 배치할 수 있다 이 렇게 보는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부지 가용성이 확인됐다는 것은

예상부지를 한 몇 개를 놓고 검토하셨다는 뜻이 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우상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용성 있는 부지들이 점점점 눈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우리가사드를 배치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NSC회의에보고해서 NSC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했고 8일 날 발표한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는 어디가 그러면 가용성이 가장 높았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관심들이 많고 앞으로 이것이, 공동실무단에서 아직 저에게도 문서로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장관에게 보고절차를 안 마쳤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어느 부지 정도면 사드를 배치할 만한 가용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에가깝게 갔으면서 장관님은 아직 어디 부지인지잘 모른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이 과정이 이렇게, 사실은 사드 같은 전략무기를 데려오면서 국민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해 놓고 국방채널에서 계속 부지놓고 협상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NSC에 보고해서 결정해 놓고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몰라요. 언제쯤 어떻게 결정됐고 이것을 어디 할 거고, 그럴 때 뭘 검토했는지 최종 발표한다음에 국회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도 부지를 잘 모르신다 그 러셨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폭넓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 ○우상호 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럴 때 보안을 지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결정 가깝게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국민들에게 이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

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정에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는 보안상 불가능한 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군사 적 차원에서 무기체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 에……
- **○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NSC에서 이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 주변 강대국 간의 마찰 또 국민적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말씀들이 다 각 관계부처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처 나름대로의 대응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강도 높게 반발할 것이라는 얘기는 NSC 회의에서 공유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그런 데 대한 얘기는……
- ○**우상호 위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설득…… 이것이 중국이 설득되면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 치 안 하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도 우리는 그냥 관철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뜻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이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이나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 ○**우상호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 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고 있습니다.
- ○우상호 위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반대하는 전략무기를 배치할 경우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NSC에서안 해 봤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 니까? 합니다마는 저는 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전 략적 의미가 너무……

○**우상호 위원** 저는 지금 장관님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고 NSC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 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 해도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도 강행한다고 결정했다는 취 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 결할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두 가 지의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하나는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배치하는 문제인 데 결국은 국민들의 동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 서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차분히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래 서 이것이 국민 갈등의 사안이 됐다는 것, 특히 지역갈등 사안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군사적 판단, 결정권은 우리한 테 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인 강대국 과의 사전협의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으로 발표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주변 강대국 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금 경제적 보복조치를 걱 정하는 문제까지 와 있다는 점, 이런 점은 NSC 에서 논의할 때 지나치게 간과한 게 아닌가, 저 는 이렇게 우려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 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ㆍ러 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가 협의된 시작부터, 초 기단계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 미 측이나 충분한 소통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측의 군사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 의 불가피성이나 이 문제가 갖는 우리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왔습니다.

○**우상호 위원** 해당지역 선정은 언제쯤 하실 겁 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지금까지 수주 내 로 할 것이다 또 여러 국민들 또 지역에서도 많 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역시 그 발표도 지역주민 들의 의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관 철해 나가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 저 희들이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과정과 절차에서 지금 같은 방식 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점 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또 국 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외교적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 해서 저희들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원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 이철규입니

우선 좀 전에 우리 전체적인 질문 요지는 우상 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지적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 니다.

우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어용입니다.
- ○**이철규 위원** 명확하게 방어용입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 ○이철규 위원 그렇다면 저도 우리가 다른 나라 를, 타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드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또 원거리까지 공격이 가능한 정밀타격무기가 있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나라도 정밀타격무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가지고 있고 또 미국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드의 도입배경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 민국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도입의 협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오로 지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쪽 으로 협상에 임하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 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 위적 방어조치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드로 다른 인 접국가를 공격하거나 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 기는 아닌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무기체계가 아니고 전혀 그러할 생각이 없습니다.

O이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유도탄,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금이 정도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무수 단 같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기 때 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에 동의를 하고 협상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반드시 무수단을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계 열의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고, 경우에 따라서 무수단 같은 것이 우리 대한 민국에 탄착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 다.

○이철규 위원 우리가 이 방어체계가 없으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도 없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의 제한된 북 미사일 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시켜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도, 야당에서도 이 도입 자체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도입 과정에 밀실행정 또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강도 있게 하셨는

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협상을 진행하고 또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까지 마치 무슨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또 인접국에 무엇인가 이 장비가 도입됐을 때, 무기체계가 도입됐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위해를 가할 수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무기체계인 양 비쳐진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해명을 하고, 우리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좀 더 강력하게 설득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십 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사안의 성격이 공개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사안이,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O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사드라는 체계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이런 핵위협 또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토의 안전, 국민의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어체계가 도입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협의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과정이 한미 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마다 온통 난리입니다. 특히나 국정의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은안 된다 또 도입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큼은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드의 배치 부지를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의 영향이, 정치 영향이 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 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어차피 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면 어떤 경우라도 장비의, 무기체계의 운영의 효 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지 여기에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결부돼서는 절대, 결코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의합니다.

○이철규 위원 이런 보도라든가 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때 단호하게 장관님께서 이걸 거부 하고, 부지 결정에 어떤 정치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오직 군사적 요구수준에 맞는 부지가 분명하게 선택될 것입니 다.

○이철규 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그동 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예정지로 거론되던 지역 들, 이런 지역들이 아닌 제3의 부지가 다시 검토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거론했던 지역은 비교적 이런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 건을 검토해 가지고 아마 예정지로 거론을 했을 텐데 이런 지역이 빠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 역, 또한 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위치가 적합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 고 장소가 만약에 변경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 마 결코 거기에 동의도 하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이 부지 선정에…… 이미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계신 걸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최종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정 하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동실무단은 여러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가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검토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겁니 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

적지라는 뜻입니다.

○이철규 위원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사실상 이 부지는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부지는 이미 확 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파 문제 때문에 괴담이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드 설명에 보면 전자파가 조사되는 방향으로 100m 거리까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 다고 나오고 100m가 넘어가면 인체에는 큰 위해 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합니 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국제기준, 국내기준에 안전거리 기준이 100m입니다.

○**이철규 위원** 만약에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사실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도달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결국은 국민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 종걸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7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비대위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전격 결정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장관 께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예고가 왔을 때 저희는 장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절해야 되느냐는 점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점 혹시 들어 본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보고를 듣고 저희 비대위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보장이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것 들으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또 나중에 그 성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말이지요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거의 순수하게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안심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드에 대해서 이 결정 과정에 그리고 또 결정 과정에 가까이 고민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사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께는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 설명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국방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사드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에 가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종걸 위원 아니, 우리 당 내에도 국방전문 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백군기 의원님을 위시로 한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가 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장관님은 아세요? 사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국이 그냥 한국 내에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정 도 수준으로 지금 이것 대처하시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걸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걸 위원 좀 물어봅시다.

지금 미사일을 쏘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적은 비용에 저고도로 쏠 수 있는데 고고도로 쏠 특별 한 소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고고도에 요격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어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다 말씀하시면……

○이종걸 위원 그럴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유용성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이론입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100% 아는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틀립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약 1000여 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주종은 스커드와 노동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사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왜 필요해요? 그것을 뭐 하러…… 고고도로 그것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제 답변을 들으시 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스커드와 노동은 정상적인 발사 방법으로 북한 이 발사를 하면 우리 한반도 전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고도라고, 고각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수단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O이종걸 위원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을 정상궤도로 쏘지요. 그렇게 고고도로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고고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고각 사격과 고고도는 다릅니다.

○이종걸 위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북한이 쓸 미사일체계의 방어로서는 이 사드가 별효용성이 없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본이나 괌이나 미국을 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계는 주로 미국을 위한 것이다, 미국을 위한 것에 우리 한국 영토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미군기지 내에서 사용한다면 지금까지의 SOFA 협정에의해서 미국이 그 기지 내에서 전략기획협정 내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걸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또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을 주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위원님께 서 말씀하시는 고고도라고 하는 것은 하강단계, 종말단계의 상층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일본으로 가 는 미사일, 이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국민께 말씀 을 드리겠습니까.

○이종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의 군사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정 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전략적 유용성이 떨어진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저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종걸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열 발 중에 한 발만 돼도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손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다면 우리 국 민들이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데 막 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같은 발표를 한 것인데, 사드가 세간의 의혹처럼 미국의 군산복합전문체 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단계 이런…… 업그레이 드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 가지고 열 발 중 완벽하게 핵체계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 게 못 하는 거지요, 사드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이종걸 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된 미사일 요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는 요격미사일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래도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 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작전에서 어떻게 완벽 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향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렇게까지 국민적 반발이나 이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중간적인 사드를 또 하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는 개발된 것 또 설치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이것이 미국의 예 산으로……

○이종걸 위원 최종단계입니까? 완벽한 단계예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의 예산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우리의 예산은 우리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부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미국 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한국에 부담시키지 않겠다, 방위비분담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 라는 약속은 받아 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 은 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르는 것입 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저 희들도 방위비분담 협정 과정에서 이것은 설치된 이후에 계속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관 한 큰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이 결코 이것은 한국에 분 담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혹시 명시받은 적 있 어요? 그런 얘기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지금 반대하는 분 들의 논리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하듯이 전 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 분명히 우리에게, 국익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어디 에 어떻게 설치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반 대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전자파에 국 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태 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깜깜무소식 상태에서 급 격하게 신속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준비절차 를 거치고 명분도 얻고 또 인접국의, 중국이나 일본도 방위비분담 과정에서 일본도 분담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장품 파는 태 평양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칠곡이니 어디니…… 이 과정에서 시간 가면 대통령선거 앞두고 반미, 심각한 국론분열 같은 것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시간도 두지 않고 급격히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잘 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소상히 관련 사항을, 군사적인 전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것이 잘 관리되는 가운데 결과가 맺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충 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우상호 위원님 또 이종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만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저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같아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보수파 논객으로 알려진 김 영희 교수가 쓴 중앙일보 글에 사드를 포기하자 는 그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읽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아주 얘기가 좋은데, 그 속에 보면 완전히 지금 사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축적인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도 장군 출신이지만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 사드 문제는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있지요? 그것 지금 계속 강경모드로 갔지요? UN 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관계를 통해서 지금 압박 을 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국면에서 사 드를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만약 지금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정책을 밀고 가는 입장에서 두 개가 언밸런스해요. 분명히 북한을 옥죄는 정책을 성공하리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9월, 10월까지 가면 그 효과가 나리라고 어떤 고위당국자가 얘기도 한 적이 있 어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떤 고위당국자가 발언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몇 달 만에 효과를 보리라고 우리가 생각할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중로 위원 일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게 성공하리라고 신뢰를 하고 믿고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전쟁 때도 적과 대화의 채널은 두는 것 아닙니까, 비공식·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서 1%라도 실리를 쌓아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다 염 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좋습니다.

우선 아까 이종걸 위원님이 아주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 나눠 주신 이 유인물 한번 보세 요. 첫 페이지 타이틀이 '배치 관련 협의'예요, 협 의. 맞지요, 위원님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위원 이것 엊그제 장관님 오셔서 보고할 때 제가 이 타이틀을 보고 '참 이상한 나라의 의사결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그날 발표는 아침에 와서 이것 보고도 아니고 사후보고도 아니고 통보 아니겠어요? 협의가 아니지요, 그건.

아까 이종걸 위원님도 화내시는데 이것 지금 국민들은 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드가 뭔지. 어떻 게 이렇게 온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를 국회도 모르게 그냥 행정부 중심으로 그것도 저 는 굉장히…… 이것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지만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를 말씀하는데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는 각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의 의견이 있고 그 것을 종합하는 안보실 의견이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자료의 2-1 페이지. 이 밑에 군사적 효용성, 부지공여 가능 성, 안전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 및 적용한다. 여기 에 군사적인 요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안보를 중 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 습니까? 안보의 문제는 지금 포괄적인 안보지 안 보가 국방부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적 효용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여 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안보실장이…… 정말 통 일, 외교 특히 또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심지어는 문체부까지 가능해요, 문화교류, 관광 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려면 총리실 이나 NSC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 견해가 어떤지 저희들 은 아무것도 몰라요. 외통위도 아마 열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라인이 심각해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것은 아예 미군들은 우리 전문가들 이 접촉하는 상태도 안 되고요.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문가가 여기 가서 정말 무기가 시험평가를 거쳐서 완벽하게 됐는지, 지 금 2대는 교육용이고 2대는 집결 보유하고 1대는 괌에 배치하고 2대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ER인가 또 2년 후인가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무기의 진보화 현상이 일어 날 겁니다, 노후화가 아니라 진보화 현상.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비용을 더 내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PAC-3, PAC-2도 그 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이번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실리 문 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래서 지 금 국회 비준 문제, 영토 공여 문제 해서 국회 비준 문제를 문제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연기하자는 결의안도 국회에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 진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이것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드 하는 것 좋아요.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타이밍이 아니 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내가 존경하고 육사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도 하고 통찰력은 아 니지만 역사적인 안목은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 데, 훌륭한 장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 금 장관이 하시는 이번 사드 문제만은 제가 동의 할 수가 없어요. 타이밍의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 게 검토해 보세요, 최대한. 저희는 지금 남북관계 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주권이나 국가 주권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추진해 가는 북한 압력 정책을 계속 가셔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것이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하더라도. 한번 장관님 검토를 해 주시기 를 바라고.

너무 제가 꾸짖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미국 에서 저희한테 배치하겠다, 1개 포대지요, 그렇지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위원 그러면 한국 전체가 1개 포대면 됩니까, 방어한다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1개 포대가 방어 가능 한 범위는 대한민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후방으로 배치 했을 때는 한강 이북은 지금 50% 이상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완전히 보장 안 되잖아요, 그렇지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님, 정말 진심으로 제가 당부합니다. 장관님 옛날의 그 의지, 철학, 어떻게 장관 하시더니 좀 변했어 요,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 십시오.

이 사드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주 셨잖아요. 자료 주신 것도 53년도의 한미방위조 약에 의해서 지금 대여를 해요. 허여(許與)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지금 몇 번이나 개정한 적

있습니까, 이 방위조약?

○국방부장관 한민구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김중로 위원 SOFA는 여러 번 개정했는데 이게 6개조로 돼 있더라고요. 4조에 이게 포함이돼서 지금 법적으로 대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 자료에는 무기체계 배치라고그러는데 이것 무기체계는 그 당시의 무기체계로 아주 허약한 무기입니다. 지금 무기체계의 환경이 변했는데 이 사드 문제는 그 무기체계를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어요. 국제 안보환경이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이게 넘어갈 게 아니라고저는 판단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역사와 국민에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 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 을 드리면……

○위원장 김영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것은 국가 생존의 그러한 책임을 진 국방장 관이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체계 라고 생각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 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아 마 같은 맥락에서 질문 주실 것 같아서 그때 답 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저도 사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이 문제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나 결론에 동의해서 그런 게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

문에 예의를 갖출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속한 결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 겠다는 건데, 6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법사위에 가셔서 '올해 안에 배치를 결정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질문이……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언제 되느냐'에서 '올 연 말에는 끝나겠나' 이런 질문이 계셔서 '그때까지 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철희 위원 올해 안에 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7월 5일 날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보면 6월 말에 구두보고를 받았고 이미 그때는거의 결정됐고 7월 초에 사실상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6월 29일 날 국방위 질의할 때 '사실상 결정해 놓고 지금 부지 선정만 남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 대답을 다시 한번……

○이철희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 다 뒤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7월 5일 날도 장관님은 결정된 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정부질문은 제 기억으로 는 이채익 의원께서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고 부 지가 결정됐느냐라고 하여 제가 부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O이철희 위원 부지도 오늘 답변하신 것 보면 6 월 말에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나 그것이 지금 결정 과정에……

○**이철희 위원** 자꾸 그렇게 말장난 하지 마시고 구두보고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말장난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철희 위원 아니, 최종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과 장관님이 진행상황을 구두로 보고 안 받았 다 그러면 안 받았다면 그게 직무유기지요. 내용 을 아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결과보고를 안 받 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철희 위원** 6월 29일 날 국방위에서도 이렇 게 말씀하셨어요. '절차상 밟아 가야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 절차가 뭡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지금도 공동실무 단이 최종 합의해서 자기들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절차가……
- ○이철희 위원 아니, 그 보고서는 의미가 없잖 아요. NSC에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보고서가 무 슨 의미가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는 정책결정을 한 것 이고 이 공동실무단이 가장 중요한 부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철희 위원 아니, 그날도 제가 그렇게 물어 봤잖아요. 배치하는 여부는 이미 결정 났고 부지 만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것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바 꾸세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배치 결정도, 정부 내의 의사결정이 7 월 7일 NSC 상임위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 니까……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6월 29일 날 그렇게 답 변하고, 6월 28일에는 올해 안에 결정날 거라고 그랬고 6월 29일 날은 그렇게 얘기했고 7월 5일 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제대로 된 보고도 안 받았 다고 그러셨는데 7월 7일 날 NSC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은 7월 6일 날 보고 받았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제가……
- ○이철희 위원 아니, 그 질문에만 대답해 보세 요. 그러면 보고 안 받으셨어요, NSC 가기 전까 지는?
-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 가기 전에 보고를 받지요
- ○이철희 위원 그러면 받은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그 질문의 포인트 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 ○이철희 위원 그것은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 는 거고 크게 보면 이미 다 결정된 것을 국회에 와서도 지금 답변을 숨긴 거잖아요. 누가 봐도 숨긴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어떻게 장관이…… 제가 우선 제 발언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 게....

- ○이철희 위원 됐고요.
 - NSC 상임위원회 7월 7일 날 있었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철희 위원** 언제 소집 통보받으셨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전날 상임위원회 한다 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철희 위원 전날?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철희 위원 7월 6일 날 통보받으셨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들은 것은 그렇습니 다.
- ○이철희 위원 그러면 누가 주재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NSC 회의를 7일 하기 전에 관련되는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무적 인 논의들이 있었고……
- ○이철희 위원 그 관계 부처 간의 논의는 그러 면 7월 5일 날에 있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7월 4일 날 논의가 있었습 니다.
- ○이철희 위원 7월 4일 날 논의해서 다 결정됐 는데 7월 5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딴소리 하신 것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 ○이철희 위원 아는 것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 ○이철희 위원 아니, 보고받은 게 없는데 어떻 게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합니까?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라든지 결정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 ○이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국방부 차원의 결론이 있으니까 관계 부처 간에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ABC 아니 에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결론이 있어도 제가 그것을 최종 결정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는 제한 이 있었습니다.
- ○**이철희 위원** NSC 회의는 누가 주재했습니 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상임위원장이 합니다.
- **○이철희 위원** 누구입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안보실장입니다.
- ○**이철희 위원** 참석 멤버는 누구 누구였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 상임위원회의 멤버 들입니다.

- ○**이철희 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안보실장과 통일부, 외교 부, 국방부장관 또 안보실 차장 이런 분들을 중 심으로 해서……
- ○이철희 위원 그러면 NSC에서 논의할 때 통상 우리 회의하는 것 보면 자료 깔잖아요. 그 깐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각 부처는 자기들 자료를 자기가 만듭니다.
- ○**이철희 위원** 국방부 자료 만들었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자료는 당연히 제 본했지요.
- ○이철희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7월 7일 날 NSC에서 한 자료는 배치의 가용성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가용한 부지가 이미 다 확정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의 가용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 ○이철희 위원 아까 우상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찬반 토론이 있었습 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의견이 있으면 다 돌 아가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 ○**이철희 위원** 그 찬반 토론이 있었던 거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 ○**이철희 위원**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낸 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 ○**이철희 위원** 아니, 결론을 어떻게 내셨느냐고 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론은 배치 결정을······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서로 장관들끼리 의견 이 상충하면 결론 내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 까? 어떻게 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의 회의 내용 자체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관 사항이……
- ○이철희 위원 그게 회의 내용입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 ○**이철희 위원** 회의 방식, 어떻게 결론 내는지 방식을 묻는 거예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식은 여러 사람의 의견

- 을 죽 듣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
- ○**이철희 위원** 이미 결론 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NSC 전에 장관님께서 대통령 보고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를 통해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 ○**이철희 위원** 그 이후에도 보고한 바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한 적은 없으신 거지요, 장관님께서?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직접 보고한 적 은 없습니다. NSC를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 ○이철희 위원 지금 그렇게 생존권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그러고 자위권 차원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7월 7일 날 NSC 결정하는 회의 소집조차도 통보받으셨어요, 장관님은? '이렇게 중요하니까 NSC 열어 가지고 결론냅시다'로 요청한게 아니에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 ○**이철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결 정을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 서 그 회의를 그날 7일 날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여기 국방 위 했고요. 7월 5일 날 대정부질문했을 때 '전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지선정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보고받은 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이미 7월 7일 NSC 열기 전에 논의가 다 끝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게 됐다면 제 발언……
- ○**이철희 위원** 아니, 이해되는 게 아니라 상식 적으로 반대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때그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일 뿐입 니다.
- ○**이철희 위원** 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 충질의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와서 이런 답변 하셨습니다. '소위 부지 조성비용 정도만 우리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속기록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에.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 ○**이철희 위원** '소위 부지 조성비용 정도만 우 리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새로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부지의 성격······ 아니, 해당 부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 ○이철희 위원 상식적으로 원래 있던 미군기지 에 이게 들어가면 '부지 조성'이라고 표현 안 하 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떤 부지냐에 따라서 달 라지고……
- ○**이철희 위원** 그럼 기존 미군기지 내에 들어갑 니까, 새로 부지를 우리가 제공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부지와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 라……
- ○이철희 위원 아니, 유보할 게 아니라요, 어느 지역인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양보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새로 제공하는지, 기존 부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답변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부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철희 위원 어떻게 직결되지요? 어떻게 직결 됩니까? 아니, 지금 남쪽에 주한미군기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신규 토지를 제공한다. 신규 부지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확정이 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부지 조성이라고 하 는 것은
-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신규 부지를 줍니까, 아니면 원래 미군이 쓰던 부지 안에 들어갑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그 답변을 하는 것 ۰].....
- ○**이철희 위원** 답변 못 하시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지금 석간에도 여러 신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지를 특정 하는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 린 것입니다.
- ○**이철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

느 지역을 염두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 리가 2004년에 평택에 땅 줄 때도 그랬고요. 신 규 토지를 제공할 때는 국회비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근저 때문에 장관님께서 답변 안 하시는 거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 ○이철희 위원 신규 토지예요, 아니에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신규라 하더라도 국회비준 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 ○**이철희 위원** 2004년에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2004년도에 그것은 대규모 의 부지를 한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그런 사업이 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철희 위원 아니, 땅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 은 비준 받고 어떤 것은 비준 안 받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영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 위원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 보면 사드 체계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의 전력강화에 불필요 하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신 것 같고요.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의 전격성, 간헐적으 로 얘기는 돼 왔지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 에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가 요격률이 높고 우리의 전 력에 분명히 보탬이 되고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파 장을 낳는 그런 정책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 월 7일 날 NSC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바로 익일 8일 날 11시에 바로 발표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가 어떤 요인 들에 의해서 서둘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 구심 같은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그런 게 있고요.

이것의 파장이 크면 일단 국민들에게 전자파가 어떻다, 환경 문제, 국민들 건강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어 떤 대국민 홍보라든가 어떤 사전 정지작업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통칭해서 정무적인 조치라고 해

요. 이런 정무적인 논의나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거기 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인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측면에서의 부족함이라고 있다면 우리 국방부가 군사적 관점에서만 주로 이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방부는 그렇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드 배치 정도의 중요한 정부의 결정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긴밀하게 정무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럼 그 협의가 결여된 채로 발표된 것입니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정도의 사안은 아주긴밀한 정부 내의 협의를 거치는데 그 협의의 내용 중에는 정무적인 협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간과되었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은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내부적인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신다 니까 저희가 좀 더 사려 깊었어야 되지 않나 생 각합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7월 8일 날 11시에 발표한 것은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준비 끝에 발표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나름대로는 6월 말에 부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 좋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기자회 견을 통해서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에서, 일부 야당에서 국회비준을 얘기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재정적인 부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이것이 헌법 60조에 명시돼 있지요.

과연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인데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000억, 그렇지요? 1조 5000억은 전액......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군 부담입니다.

○정진석 위원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 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 5000 억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아직 부지 발표를 지금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 하는 이철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새롭게 시설투 자를 하지 않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 존의 미군기지 내에 이 사드 배치가 이루어진다 면 특별히 더 들어갈 추가비용도 없는 것이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이 위원님께서 '조성'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새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성'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부지든 기존 부지든 그 용도에 맞게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 게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본 위원이 정무적인 충분한 논의 와 사전준비가 선행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한 것은 지금 당장 무슨 일부 신문에 무슨 경북지역 의 특정지역이 신문에 나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이 전체적으로 궐기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잖 아요.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괴담이 횡횡하다 보니까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고 환경파괴가 있고 이런 저런 괴담이 난무한다 이거예요. 사전 에 정지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줄일 수 도 있었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그 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사드 체계가 전개되면 관련된 레이더가 한반도 남한 쪽의 반경 3분의 2 정도를 커버한다고 그랬 나요,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레이더가 아니고 요격미사 일의 방어범위.

○정진석 위원 요격미사일의 방어범위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정진석 위원 관련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나 온다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드가 전개될 때 같이 병행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레이더 말 고 그전에도 비슷한 미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레이더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군이 여러 가지 종류 의 군사용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그 레이더가 지금 사드와 관련돼 새롭게 배치되는 레이더와 비교할 때 전 자파의 강도가 덜합니까, 적습니까, 과거에 기 사 용하던 레이더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각 레이더의 출력과 관계 되는 문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드에서 요구 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기 우리 전력에 사용하 던 레이더로 인해서 어떤 환경파괴나 어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 록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없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 더에서도 아무런 그런 문제는 나타난 바가 없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그 출력에 있어서 새롭게 설치돼 있는 사드 관련 레이더는 더 약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출력이 지금 기존 사용하 는 것이 사드보다 출력이 더 센 것도 있고 더 약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센 것도 있었는데 그것 으로 인해서 환경에 또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했 다는 그런 기록은 아직까지 없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우**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진영 위원 저희가 7월 8일 날 류제승 국방정 책실장이 미국과 같이 발표를 했지요, 이것? 이 발표가 정부의 확정적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앞 으로 진행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 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것은 뒤로 갈 수는 없다,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 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가 결정한 바를 발표 한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확정적인 겁니 까, 지금 정부 입장으로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를 정부가 결정 한 것입니다. 저는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진영 위원 그게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발표를 국방정책실장이 했다고요. 그러면 국방정책실장 은 공동실무단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동실무단의 상급자입니 다.

○진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부에 의사결 정을 건의하는 단계에 있는 데서 국가가 그렇게 중요한 확정적 의사결정을 했으면 국방부장관이 발표해야 보다 더 확실한 것 아닌가요? 국방정책 실장이 발표했다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또 그러 면 실무적 차원의 얘기니까 변경될 가능성이 있 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표를 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안 했나요, 이것?

○국방부장관 한민구 절차상으로 공동실무단에 의하면 그들이 부지를 확정하고 건의하고 장관에 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북 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무수단 발사 등 굉장히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치한 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정부가 먼저 결정한 것입니 다.

○진영 위원 먼저 결정을 했더라도 발표자가 누 구냐에 따라서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이 발표 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영 위원 정부가 지금까지 사드에 관해서 죽 이렇게 해 온 입장,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미국 도 너무나 남북 간의 거리가 짧아서 사드가 그렇 게 군사적으로 큰 이익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2013년도 미 의회 조사보고서에도 있고 2015년도 미 의회 조사보고서에도 미사일 방위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 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 니다마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언급을 안 하고 의사가 없는 듯한 이런 태도로 오다가 갑자기 바 뀐 게 뭡니까? 미국이 바뀐 이유와 한국 정부가

바뀐 것은 언제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도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금년도 2월 2일이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금년 2월 7일경이다 이렇 게 보면 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긍정적으로, 긍정·부정이 아니고 정식 협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식적으 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한미 양측 간에.

○진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 입장은 그때까지는 미 측이 협의를 요청하면 공식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럼 정부의 입장은 없었다는 얘기 인데, 이게 배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가 없 었다는 얘기인데 2월 7일 날 공식 협의를 개시한 다고 발표하고 7월 8일 날 공식 배치하겠다고 발 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영 위원 그게 다섯 달이라고요. 이 다섯 달 동안에 정부가 내부적으로 토의만 한 거지요, 실 무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것이 내년 말까 지 배치를 완료하려면 거쳐야 될 단계가 제일 중 요한 게 지금 국민적 동의예요. 지금 배치지 발 표를 하면 국민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란 예측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영 위원 그런데 방폐장 같은 것, 다른 경우에는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내 지역은 안 되겠다 이런 거라 어떻든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해야되는데 사드 배치는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왜 지금 들여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발표해 놓고 그 지역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 든 주민들께는 동의를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 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배치 지역을 발표하 기 전에 그 지역과 상의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절차가 어떤 형식으

로든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변드렸습 니다.

○진영 위원 그 배치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방부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치지역의 단체장이라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지 단체장들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이 없이 국회에 얘기한 거나 다른 데 얘기한 것으로 봐서 사전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지금 말이지요, 국회에도 바로 발표하기 그 직전에 와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는 국민 설득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일본에 X밴드 레이더를 두 군데 배치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지금 두 군데 설치해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때 하나가 2006년이고 하나가 2014년입니까?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발표할 때그 지역단체장이 와 있더라고요. 발표하는 사진에…… 아니, 발표하는 현장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기사에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국민과의 동의와 협의 속에서 이게 진행이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밀어붙이기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주변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북한 핵 과 미사일에 관한 대목 거기인데 우리 국방부 얘 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얘기가?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영 위원 그것을 초지일관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지금 주변국에서. 그 것은 왜 그러나요? 우리 말이 설득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설득하는 사람이 설명이 잘못돼서 그러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문제를 삼기보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설명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 는 것을 보면 그 무기체계, 저희가 봐서는 더 많 은 전략적 함의를 포함해서 평가하고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그런 문제가 미칠 파장 그것을 걱 정하는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고 또 가장 중요 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실효 성에 대한 것도 충분한 설득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설명은 장관님께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면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납득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하냐 말이야, 그 정도의 어떤 방위를 플 러스시키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큰 파장이 오는 사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요.

안전에 대한 설명도 지금 100m 이내에는 괜찮 다고 그랬지만 이게 각도가 몇 도가 돼서 100m 까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고 이런 부분이 기 술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협의 시작하면서 결정할 때 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그 러는데 과연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설명이 없 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게 결정돼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우**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 ○경대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데 관해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는 문 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해서 꼭 설득하 고,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배치를 못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작년에도 대정부질문 때 당시 총리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가 당사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했는데 결 과적으로 지금 중·러가 반대를 하지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결정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사 드가 방어하는 주된 무기가 스커드 또 노동 미사 일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지만 무수단도 고각발 사로 하면 괌이나 이런 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말 단계, 말하자면 하강단계에서는 사드로 요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사드가 도입된다 해도 2017년 정도인데 그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로 남아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 기에는 오히려 1000여 발이 날아오면 그중에 사 드로 방어하는 것은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0 발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900발은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날려 보내는 그 원점 을 타격해서 선제적으로 제압을 하는 그와 같은 작전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드의 효용성 이 높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는데 장관님, 어 떠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만약에 평시에 북한이 예 고 없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을 것입니 다. 전시에는 여러 가지 미사일작전을 고려할 수 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 위원님 말 씀하시는 것처럼 대 미사일작전은 우리가 방어하 는 요격작전도 있고 또 적의 미사일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괴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작전도 있 고 다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지 결정 부분은 지금 한미 공동실무단 에서 최종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군 데로 정해져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책임자는 국방부 정책 기획관이 실무담당자로 여기 보고서에 돼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에 이 후보지를 결정 하는 데 정치적인 고려를 장관님께서 의견을 피 력하신 적이 있는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앞으로 또 최종 결정을 해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는 단계 에서도 그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지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 전 지역의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 까 이것의 일정을 빨리빨리 더 진행을 해서 하루 속히 후보지를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지는 철저히 군사적 요 구를 충족하는 부지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거기 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으 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사드와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장관님께서 전자파의 실질적인 위해 범위랄까, 이게 반경 100m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전자파 피해지역이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고 농작물에까지 이 피해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측정할 수조차 없다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각 지자체단체장들도 삭발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막 이렇게전 지역적으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국방부뿐만 아니라 앞에서 NSC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국민들불안을 해소시켜줄 그와 같은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군사적 호용성이 입증된 것이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 전자파의 위해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가장 짧은 거리의 기지 내에 있는 장병들 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에게는 관계가 없 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어찌 보면 적절치 않다 이런 뉘앙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절대적인 무기라면 임기를 한 달 남겨 놨더라도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 니다.

○**경대수 위원** 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회 동의 여부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관심 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 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 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경대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상 호방위조약 제4조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 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는 대한 민국이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이 이를 수락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판단을 해 보면 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곤란한 게 아닌가.

물론 미 용산기지를 평택 이전할 때는 국회의 동의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사드의 문제를 동열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 지 않을까. 앞으로 사드보다 더한 무기 들어올 때마다, 미군 부대에 무기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의문 이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용산기지 이전이나 평택지 구로의 주한 미군기지의 재조정, 즉 YRP, LPP 같은 것은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그 조항에 의해서 국회 비준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고, 사드는 소위 고도의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겁니 다.

참고로 참여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이나 함의가 비교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이나 여론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바가 없고 제기억으로는 북핵 해결조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 결의안이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의결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한미 간 합의로 결정해서 오늘에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사드의 국회 비준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게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부지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개·운영에 관해서는 1조

5000억 원을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국회의 예산심의 · 의결권으로 우리가 다루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드가 아주 완벽한 무기체계는 아니지 만 지금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는 데는 가장 최 적의 방어무기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배치를 해 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장소는 군사적인 고려로 가장 최적합 지, 가장 효율적인 곳 여기에 정치적인 고려 없 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마지막으 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런 방침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여러 가 지 정부의 노력 또 동의를 구하는 노력 이런 데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사드의 방 어범위가 우리나라 영토의 한 2분의 1 정도 된다 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병기 위원 그러면 1개 포대가 설치된다 하 더라도 우리나라 지역 어디에 설치된들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나머지 지역 을 방어할 대책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도 한미가 패트리어트 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중 요한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사드 가 어떤 지역에 배치가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 시는 그러한 방어밀도가 약한 지역에 추가적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어밀도가 증가돼 서 전체적으로 미사일 요격 능력이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사드로 방어 를 할 수 없다면 나머지 지역은 패트리어트 미사 일로 방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전 지역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를 하면 되지 사드를 굳이 지금 이렇게 배치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좀 더 말씀…… 그러면 사드의 1개 포대 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지역을 방어하려면 사드 포대가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방어가 되는 것 아 닌가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2분의 1 내지는 3분의 2라고 하는 수치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2분의 1이라면 한 2개 포대 정도가 해당이 되겠 지요.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1개 포대는 지금 설치를 하고 나머지 1개 포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만약에 우리가 사드가 또 하나 필요하다면 우리 돈으로……

○김병기 위원 그것은 저희 비용이 들어가야 되 는 거지요, 수조 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도입을 한다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지금 계획이 패트리어트를 기본으 로 하는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 계를 만들면서 패트리어트를 더 성능 계량하고 또 패트리어트 수준의 우리 국산 M-SA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패트리어트보다 더 윗고도 에서 요격할 수 있는 L-SAM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어서 그런 체계로 방어망 을 좀 촘촘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해 보 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에 장착된 레이더의 탐지범위 각 도가 한 120°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러면 측후방은 사각지대가 되 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떤 특정 방향으로 120° 방향으로 하면……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120°니까 어쩔 수 없 이 측후방은 사각지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SLBM이 우리 남쪽으로 내 려와서 그 측후방, 그러니까 사드가 어느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확인이 될 테고 그러 면 그 측후방에서 SLBM을 갖다가 발사를 했을 때 사드가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SLBM이 측후방으로 오는

경우의 사드의 방어는, 사드뿐 아니라 패트리어 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얼마나 경보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 할 수 있느냐, 패트리어트 같은 것 다 그런 차원 에서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 면 됩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다면 잠수함이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되는 것인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해군 전력상으로 보면 미군의 전력을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잠수함이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전력상?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현재는 북한보다 훨씬 우세한 해군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 변을 드리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북한 SLBM이 전력화가 되면 저희들이 더 밀접하게 그런 대잠수함 작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드, 지금 방어무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장관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다고 가정하고 장관님이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부담이 가기에 어떠한 방패를 가진 사람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방패는 조금 작더라도 도끼를 가진 사람이 부담스럽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어보다는 공격적 무기를 가진 사람이 더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라는 무기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드 같은 방어무기에 수많은 돈을 들일 게 아니라 미군으로 하여금, 물론 미군이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랩터를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랩터 같은 강력한 공격무기,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했을 때 북한을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요청을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우리가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800㎞ 정도의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유의미할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로 부담을 가질정도의 강력한 공격무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방

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 중에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신 부분은 이것은 미국의 예산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병기 위원 예,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한국형 3축 체제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병기 위원 이번 사드 발표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남는데 사실은 이 사드 무기 는 이미 군사적 무기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그런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무기에 대해 서, 우리가 이 무기를 도입할거면 외교적으로 우 리나라가 미・일・중・러로 둘러싸인 그런 국가 지정학적 위치를 어쩔 수 없는, 그 위치상 가장 외교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 무기 도입을 갖다가 발표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 는데,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가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중ㆍ러를 압박 하면서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ㆍ러가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의미하게 제 재한다면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지 않겠지만 그렇 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입하게 된다고 이것을 외교적 무기로 사용했다면 지금보다는 훨 씬 더 중·러의 반발을 무마하고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이 갑자 기 이렇게, 그런 시점을 놔두고 갑자기 결정된 이유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부분 의미 있는 말씀이 신데 북한이 핵실험을 금년도에 1월 6일 날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2월 7일 날 했는데 사드에 대한 공식 협의요청이 2월 2일 날 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는 이것을 협의도 하지 않고 또는 협의 시작 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택일이라고 할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검토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병기 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게 남는 것이 사

드문제가 사실 맨 처음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만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2014년 6월부터 사드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에 대해 서 전혀 사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일례를 들면 중ㆍ러에 대해서 7월 7일 날 통보하면서 국민들 에게는 7월 8일 날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국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만약에 배치해야 된다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오는 것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궐기대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궐기대회가 일어나는 그 지역 에 지금 배치가 돼도 문제이고, 만약에 그 지역 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결정된다면 그 지역 은 또 정치적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궐기를 할 수 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제2의 강정마을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 까?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열심히 설득하겠다는 그런 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설득하여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국은 배치가 되는 주민 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필요성과 또 이것을 걱정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 · 환경 · 안전 이런 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그렇게 정보가 잘못 전달이 되고, 그 렇게 인식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소상하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는 것밖 에는, 다른 말씀을 현재로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 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서 개별 질문에 들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한민 국은 정치·경제·외교·군사 전반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겁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 거기에는 대북 정책의 실패에 대한 심판도 포함됩니다. 대북정 책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 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1년 6개월 뒤에 차기 정부가 국민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할 국가적 중 대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 방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방위원회에서의 장관 의 답변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중에 사드 배치의 군사적 유용성이 확인됐고, 그래서 7월 7일 NSC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한 사 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우리 국방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들 하 셨어요.

심지어는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 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드 배치가 확정적이 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논의 중'이라고 그 랬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NSC가 발표를 했어 요. 따라서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NSC는 장관이 요청한 적도 없고 VIP에게 직접 적으로 대면 보고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장관은 물론이고 총리 또한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고 볼 수밖 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에서 한 것이고 장 관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 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국방의 주무 부처인 장 관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데 대해서 저는 장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드렸던 질문입니다마는 박근혜정부의 대 북정책의 기조는 압박과 제재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동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압박과 제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북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의 정책이고……

○김동철 위원 그것은 초창기였고, 초창기 정부 출범 때 이야기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최근 들어서는 북핵 상황

이 불거지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6월 23일 날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리고 그 때 말하는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얼마 전에도 '시간이 문제지 제재와 압박의 대북정책은 성공할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제재와 압박을 한 2∼3개월 하고서······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문제 이지 성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속 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보수 정부 8년 6개월 동안 제재와 압박을 해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의 주장대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사드 배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드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그런데 이 정부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지요. 왜 사드를 이렇게 빨리 배치합니까? 이렇게 국민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말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장관이 '여기에 끌려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는 장관을 포함하여 주무 부처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NSC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 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고 대통령께……

○김동철 위원 제가 증거를 세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분명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의 답변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회의록을 보면 6월 중에 이미 사드 배치는 사실상 확정이 돼 있고 7월 7일에 NSC에서 결정되리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논

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배치할 필요도 없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포기할 텐데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이 정부는 아무튼 압박과 제재니까……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어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북 제재가효과가 있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필수적이지요, 그렇지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 대북 제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처럼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제재를 해야 해요. 그것도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돼요. 북한이 굴복할 정도의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스스로가 그 압박강도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압박과 제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된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러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요.

○**김동철 위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중국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짧으니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와 압박의 2270호를 직접적으로 한 책임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 하리라고 보고……

○김동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서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 요?

대북 제재에서 사실상 이탈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장관님 답변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중ㆍ러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자기들이 일정 부분 지금까지 언 명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드 하나로 그러한 입장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하나의 예상이지 않습니

까? 장관님의 예측인데 그것이 틀렸을 때는 분명 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예측이 틀렸을 때 는요. 답변까지 받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 배치 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북한 역 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속으로는 엄청나게 반 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원해 졌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지금 미 사일과 지상군 배치까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 까?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들어가 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당사국 모두가 대북 제재에서 한 목소리를 냈었 는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이제는 한반도 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들어가 고 동북아가 결국은 군비 증강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서 만에 하나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전쟁이 발발이라도 한 다면 그 전장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 본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5000만 국민에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재앙이 될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박근혜정부가 과연 생각을 하고 서 결정을 내렸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국민의 동의 도 받지 않고 내린 이 결정을 반드시 유예하고, 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대국민 논의를 거쳐서 다 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된다, 결정해 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박 근혜정부의 정말 통찰력 있는 그런 재고가 있기 를 기대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충정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사드라고 하는 북핵 미사일 에 대비하는 자위적 방어조치 하나를 가지고 북·중·러 또 한미일 이런 냉전구도로의 회귀라 든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말 씀하시는 것은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그러한 염려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동의를 얻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누 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 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우 리 국민들만의 문제라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끝까지 설득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걱정은 제가 충분히 잘 알 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장관님, 추가질의와 답변시간 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 학용 위원입니다.

오늘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할 얘 기는 거의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전 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 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돼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신다고 하 면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도로 적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 좋다 그 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론 통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 파동 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괴담들이 퍼져 나가 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사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점을 장관께서 깊이 인식 하셔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 편입 수순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핵 미사일에 대비한 자위적 방어 조치일 뿐이 고 우리는 미국 MD가 아니라 한국형 MD, KA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리고 경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자파와 관련해서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시중에 퍼지고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장관께서 우리 상임위를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다 공신력있게끔 이런 것에서 초동에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라 도, 광고를 통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이러한 전자파와 관련돼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면 초기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파의 무해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리고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사드가 소위 가능한 각도가 120°라 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학용 위원 그러니까 그 120°를 벗어나는 데서 공격이 될 때는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수함에서 소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드로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이런 걱정은 또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적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북한이 잠수함 한 척에 한 발의 SLBM을 개발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군이 대잠수함 작전, 우리의 잠수함, 해상 초계기, 기타 구축함, 이런 여러 수단을 가지고 다단계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것

이 만약에 발사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조 기 경보 레이더나 각 요격자산의 레이더를 연동 시켜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낙하할 때 빙글빙글 돌거나 또 나선형 궤적을 그리는 등 불규칙한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사드로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미국의 포스톨 교수 라고 하는 분이……

○김학용 위원 맞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 서너 가지의 문제점을 옛날에 제기해서 다 검토를 했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미사일도 있고 현상이 없는 미사일도 있 어서 우리들이 다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할 때 아쉬운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장관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또 토마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정부의책임 있는 사람이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도 갖고 무게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방정책실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사실 그 TV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는 미 국방장관인데 한미가 그쪽에서 별도로 발표한다든지 하는, 굳 이 장관이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군 사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죽 검토해 온 문제였 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 지금 어느 지역으로 사드가 결정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 략적인 요충지에 사드를 정치적인 고려 없이 배 치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소모적인 논쟁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가급적 이면…… 결정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기 결정이 됐다고 하면 신속하게 이것을 발표해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역시 국군통수권자인 대 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 니다.

○김학용 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 리고요.

장관님 사드 운용 지휘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지휘권에 대해서 연합 및 합동작전에 관한 기본개념이 충분치 않은 상 태에서 자꾸만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불분명하 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이 계시는데 주한미군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의 상급자, 그러니까 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 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시나 전시는 한미연합군이 각각, 전 시 같으면 구성군이 성립되게 되고 임무가 부여 되는데 한반도 전구에서의 방공작전의 책임은 미 7공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자산이라도 7 공군사령관한테 지휘관계를 만들어 줘서 그 사람 이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평상시에 방공 작전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군 이 있기 때문에 한 측이 주도하고 그것을 지원하 고 이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작 전절차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렇게 잘돼 있으리라고 믿습니 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한다 는 그런 말씀이신데—소위 작전통제권을—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쏘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사드를 발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을 평시로 봐야 되느 냐, 전시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사실 생겨 서 제가 장관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작전을 하는 절차에 의하면 우리가 방어준비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는 것. 평상시가 4상태인데 그것 이 일정 단계에 가면 소위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 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휘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평상 시에 갑자기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소위 지휘관 계가 변동되는 그러한 데프콘 상태로 격상하기 이전에 그 상황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게 몇 분 만에 끝나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평시상황에서 아까 말한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미군의 협조 또 자산의 통합 운용 이런 걸 통해서 상황 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니다.

○김진표 위원 장관께 우선 7월 8일 날 발표한 사드 배치가 참 부적절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사드 배치에 관한 일지가 금년 2월 7일 양 국이 공동실무단을 구성했지요? 저는 그때 적어 도 이 문제는 최소 1년 이상은 충분히 협의를 해 야 된다, 그래서 만일 협의가 빨라 가지고 진척 이 7월 7일 NSC에서 큰 테두리에서 배치 결정 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외교전략 또 국내 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져 가면서 해도 늦지 않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 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문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 던 것처럼 한반도 방위의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 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한 미동맹에서 미국의 핵우산의 제공을 받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면전 발생 시 북이 두려워하는 대부 분의 무기를 태평양 함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드의 한국기지 설치가 필요하다 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 하고 그것도 강도 높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식의 강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변인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무수단 발사를 6월 22일 했을 때 상식을 벗어나게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3000km 갈 무 수단을 400km에 떨어뜨린 북한의 저의가 어디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이 시험발사를 하면서 원래 이게 작전배치된 건데 이 앞에……

○김진표 위원 제 말씀의 의도는 북한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부추기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한반도 방위에는 크게 실효 성이 없으면서 만일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 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생각보다도 강하게 유 엔 제재를 이행하면서 압박을 해 와서 북한이 지 금 괴로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드 배치 발표를 너무 서둘러서, 국민들의 동의나 사전준비 없이 이렇게 서둘러 발표한 최 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군사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북한은……

○**김진표 위원** 우선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해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무수단을 작전배치한 이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수단의소위 미사일로서의 완전성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발사지……

○김진표 위원 그러면 한번 또 묻겠습니다, 장 관님.

우리가 사드 배치가 부득이하다,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더라도 일단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에 수출한 금액보다 중국 한 나라에 더 많이 수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중국 관광객이 우리 관광객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긴밀한 경제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국에 대해서 너희가 유엔결의 이상으로 북을 제재를 해서 북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정말 못 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자체 핵 개발을 하자는 논의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드 배치를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몇 달이 되고 설득을 해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중국의 군당국은, 중국의 외교당국은 그래도 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아, 한국이 사드 배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구나'라는 결론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에 대한 압박을 좀 느슨하게 할 경우에 그로부터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오후 1시 44 분 들어온 기사인데 중국의 환구시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사드 한국배치 결정에 관련해 한국 기 업과 한국의 여러 기관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제 안을 지지하는가에 온라인 투표를 했더니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제재하라고.

제재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단절, 사드 찬성 정치인들의 중국입국 제한, 군사적대응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내용에. 그러면 국가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지 NSC는 뭐 하려고 만듭니까?

묻겠습니다.

NSC에 경제 분야에 관하여 미칠 파장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NSC 멤버 중에 국무조정실장이나 경제부총리 또는 재경부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국무조정실장이 참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말씀도 다들……

○김진표 위원 외교부장관이 7월 8일 날 이것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의견 달지 않았습니 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 다고 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2월 7일 날 시작한 협의를 허겁지겁 이래서 7월 7일 날 발표하고 이걸 집행하는 이 박근혜정부의 국가경영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과연 있느냐, 갈등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 사안은 앞으로 장소를 어디에 정하냐에 따라서 또는 그렇지 않 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중국이…… 여기 지금 헌법 60조1항 · 2 항 읽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읽었습니다.

○김진표 위원 거기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 을 지우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일 우리에게 경제적 제재, 보복관세를 취한다든가 비관세장벽을 동원해서 우리의 수출 을 막는다든가, 관광객을 줄인다든가 이런 제재 를 취할 때 그것도 우리 국민, 국가경제에 중대 한 부담을 주는 조치거든요.

또 한 가지, 당장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군기지 내에 실시 할 때 이 사드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 지이전 비용은 당연히 그것은 미군기지 내에 설 치하면 한국정부는 하나도 부담 안 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군기지 내에 있는 것은 미군이 합니다.

- ○김진표 위원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위원 그러면 미군기지 밖에다가 새롭 게 한국이 땅을 제공해서 기지를 만들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면서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위원 그러면 헌법 60조2항 "국회는 선 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2항 조문과 1항 조문을 종합해서 해 석해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몇 차 례 제소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건 본안 심의를 안 했습니다. 각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당이 다수고 국 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 의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제안을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본 안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 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헌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확정되지 않고 예상

되는 재정부담, 불확실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국회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는 법률적 검토가 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1 개 사드 포대의 전개에 필요한 부지를 저희가 혹 시 전부 공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부담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진표 위원 그것은 직접 사드…… 장관님께 서는 바로 그런 근시안적이고 좁은 생각을 가지 고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NSC는 바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 해서 각 분야를 맡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모 여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번 조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쳐지 는 심대한 영향, 이것을 함께 포괄적으로 생각해 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북핵ㆍ미 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강시키는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주변국과의 그러한 문제는 소위 이런 군사적인 문제가 정치 또는 경제적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건 또 그 차원에서 우리가 풀어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갑 지역 백승주입니다.

먼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는 장관님이 정부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북한 핵과 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도입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왜 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사드체계가 갖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정확한 이해는 누가 시켜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당연히 정부가 또 국방부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백승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가 이렇게 사드를 도입한 데 따르는 국론분열이 진행되고 또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는 데대해서 적절하게,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수단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사드체계의 가장 본질은 제가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체계에 관련해서 국방부의 기존 입장 3불정책이라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뭐 국방부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예, '쓰리 노(3No)'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요청이 없었고, 협의가 없 었고, 따라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〇백승주 위원 사드체계의 본질은 양국 간의 동 맹조약인 SOFA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전략자산 무기체계를 한국에 반입하려 할 때 한국정부에 필요성을 요청하면 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허여(許與)하고 또 허여하고 나면 우리가 또 SOFA 규정에 따라서 부지 선정과 부지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골격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NSC 결정에 따라서 정책실장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이 허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책실장이 발표한 것은 배치를 결정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승주 위원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요청 부분을 왜 설명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2월 초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협의를 시작했고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그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우리 정부가 허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아니고 그 발표문을 보면 조금 이런 과정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으로 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유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까? 군 사적으로 유용성이 좀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것도 역시 저희들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국방부가 제공한 여러 가지 팸플 릿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사드가 처음에 개발하 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쯤 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90년대 중반입니다.

○백승주 위원 1987년입니다. 그 개념을 미국 군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초기 개발 의도가 ICBM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겁니다. 장관 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 ICBM에 대비한 개발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 요격 실패 를 하고 2004년 이후에 T자가 바뀌지요. Theater에 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로 바 뀌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을 상정 해서 실험을 열한 차례 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스커드미사일이라든지 단·중거 리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그 열한 차례 실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열한 차례 실험을 스커 드와 노동 계열의 미사일을 묘사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성공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 성공했지요.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개의 미사일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 그것을 상정해서 요격실험을 했는데 열한 차례 성공했습니다. 초기에는 ICBM을 목적으로 개발했는데 중간에 록히드마틴에서 바꿔서 하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로 쭉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괌에 배치할 때 미국이 벌써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방부가 국방부 외부에 이렇게 설명하는 노력이 매우 부 족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지금 사드 괴담, 사드 관련 유언 비어가 해당 예상되는 지역에 굉장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많이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절하게 또 과학적으로 답변 을 해 줬는데 유언비어와 괴담이 과학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자파가 인체뿐만 아니라 생명체 모두에 게 영향을 준다는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런 주장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 드가 배치되려는 …… 사드가 자기 지켜 주려고 오는데, 그 지역을 지키러 오는데도 전부 반대하 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설명을 안 합니까? 설명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해당 지역에 많은 군사지도자들이 있습니 다. 고위장성들, 고급장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을 왜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에게 설명을 하러 자세를 낮추고 안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습 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다시피 미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인터에이전시 오퍼레이션(interagency operation) 개 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군사 분야와 비군사 분야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작전 을 해야 작전에 성공합니다. 육군·해군·공군만 해서 안 되고 군사조직 간에만 협력해서는 전쟁 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 괴담과 이런 문제 들은 그 지역에 있는 고급장교들이 날밤을 새워 서라도 과학적인 진실을 갖고 설명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백 위원님, 저희들이 부족 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아주 옳은 말씀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과정들이, 오늘 토론된 이런 과정들을 사드 결정 전에 공유했다 면 사드 결정 이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줄어들 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또 우리 군사지도자들이, 안보 관련 지도자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존경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이 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 았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홍보를 해서 이해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 ○백승주 위원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 좀 소 프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 가면, 왜 군부대에 가면 장병들이 편지 보낼 때 사서함을 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부대 위치 등 보안에 유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가족이나 연인에게, 친 구들한테 편지 쓸 때 사서함주소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부대라든지 이런 것도 우 리가 군사보안을 고려해서 굉장히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사서함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급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데 또 배 치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 족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략자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적의 탐지수단으 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자산을 공유하는 데도 일정한 군사보안이라는, 군사기밀이라는 이런 잣대가 무 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치지역 발표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은 보 안을 유지해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 ○백승주 위원 추가질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참 착잡한 것이 과 연 이렇게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이 사드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기에 대한민국 의 전략가들은 뭘 고민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가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되겠는가, 지금 과연 우 리 한국이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해 가지고 북 한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사드 문제가 그런 데 기여하는가, 뭔가 좀 이렇게 전략적인 논의들 이 주종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장관님

도 언론에 많이 나가셨습니다마는 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수단미사일,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 SLBM,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들다 보면 그런 말씀들은 주로 합참의장이나 아니면 야전사령관들이 군사적 검토 차원에서 많이하실 얘기지 이 국방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전략가로서 국방부장관님께서는 뭔가 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비전과 원칙,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바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얘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야전사령부 급에서 종결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주종을 이룹니다. 물론 그게 궁금해서 그렇겠지요.

장관님,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지난 한 20여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은 없는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는 어떤 상원위원장인가 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될까 하는 것들은 좀 또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만 나오면 아까부터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문에도 그렇고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이렇게 하고자꾸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국방장관께서는 사실은 또 군사외교를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의 주무장관이시고 이런 전략적 문제를 통찰해서 직무를하셔야 될 입장에 계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의 등한시하시면서 오로지 북한 미사일 억제와 방어라고 하는, 이것은 군사전문가들끼리만 해도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는 외교와 국방, 경제와 정보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요며칠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거에 5 대 1이던 북한에 대한 압박구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잘못 관리하면 3 대 3의 구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런 어떤 진영 간의 대결로 나간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구도가 고착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김종대 위원 이 사드에 관한 한은 적어도 3

대 3으로 나눠진 구도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각국의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반반씩 갈라져 있 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 5자 회담 하자고 그러면서 6자 회담 당사국들 이 북한을 압박하자고 했는데 이런 구도 자체는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사드 하나를 가지고 생기는 것을 전체 그 관련 국가들 간의 외교·안 보 또는 정치·경제·문화 이런 데 전반적인 그 러한 영역에서의 관계로 이것이 전체를 치환하는 그런 것이냐 하는 면에서……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드는 그렇게 치환이 안 되고 또 부분적인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추가질의때 계속 토론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답변 좀 해 주세요.

가장 최신 자료, 언론에 안 나오는 것만 한번 골라 봤습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 2016년 1월에 나왔지요. 여기에서 미국이 사드 체계에 대한 RGT, 신뢰성테스트를 수행했는데 발사대 발전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X밴드 레이더와 운영 인터페이스 간에도 결함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18개 군수물자 보급조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다 보면 사드포대 운영비가급격히 증대할 수 있다, 'extremely high', 즉 급격히 극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효용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 효용을 떠받치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면 올해 미 국방수권법, 즉내년도 국방예산이 들어가 있는 미 국방수권법에의한 회계연도 예산에 미국의 사드포대가 한국에배치되는 예산이 과연 편성돼 있느냐, 과연 계상돼 있느냐, 이것 확인하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는 아마 배치가 결정이 되면 8월 이후에 미국에서 회기에 맞춰서 상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1조 5000억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사드의 운용·배치되는 어떤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1조 5000억 비용 중에 지금 미국의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이나 다른 어떤 연합방위력증강 비용으로 한국의 납세자들에게서 나오는 돈

- 이 사드포대 운용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김 위원님 잘 아시겠 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다 5년 치가 협상이 돼 서 정해져 있고 매년 단년도 방위비분담 중에서도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냐고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연합방위력 증강이라고 하 는 개념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CDIP라고 하는……
- ○김종대 위원 예, CDIP는 없어졌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건설과 군사시설 예산 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액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
-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마는 자꾸 여쭤 보는 이유가 제가 머리가 나빠 그런 건지 뭐에 홀려서 그러는지 장관님 답 변을 듣다 보면 항상 말의 해석이 복잡하고 뒤에 돌아서면 자꾸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이것은 좀 분명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려는 것이지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의 운용비용 안 들어가 지요? 항목이 없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해 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 문제를 사드를 위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저희 들이 생각하거나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 ○김종대 위원 미국이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실무단의 활동이 곧 보고가 될 거 라고 그러는데 이 사드가 전 세계에 배치된, 사 드나 혹은 그 레이더가 인구밀집지역이나 또 그 인근에 배치된 전례가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지금 괌에만 1개 포대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 본토나 외부 에 전개된 데에서 이렇게 대도시 인근이라든가 또는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에 배치된 전례가 있냐 고요. 대부분 외진 데 아니에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괌 한 군데만 미 국 본토 외에서 나갔으니까 그 전례……

- ○김종대 위원 미국 본토도 물은 거예요. 거기 도 마찬가지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는 소위 군사교육기관 에 있는 것이지요.
- ○김종대 위원 거기는 주로 사막지대라든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배치가 아니고 집 결보유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배치되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미군기지가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국군의 후보지도 대부분 한 국의 경우에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있단 말이지 요. 그러면 이런 첫 케이스인데 이것이 미군이나 어떤 교범에 나오는 환경영향평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가장 절박한 나라는 대 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실무단에 환경전문 가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에 방공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종대 위원 아니, 환경이요, 환경. 들어갔지 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떤 사람을 환경전문가라 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 러운 게 전자파, 환경 괴담이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 많이 지적하는데 그게 괴담이라면 권위 있는 환경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은 다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대 위원 공동실무단이 법률이나 작전이나 환경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 다 검토합니다.
-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배치지역에 사드가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좀……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합니다.
- ○김종대 위원 합니까?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 ○김종대 위원 그러면 결정 난 다음에…… 지금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공동실무단의 상 임……

○위원장 김영우 잠깐만요, 마이크 잡고 다시 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공동실무단의 상임위원들로, 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또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하는 것인지 뭐 지금 상임위원회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전혀 내막을 몰라요. 이 편성을 보고도 업무 내용을 모르니까 환경에 대한 검토 결과물을 지금이라면 보고서 작성 단계니까 밝혀 주셔야 자꾸 사드 괴담이니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우선 환경평가 부분은 SOFA 절차에 따라서 부지공여 전에 명료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파의 위해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새누리당 이종명 위원입니다.

앞에 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그 질문들 속에서 잘못 오해를 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 서 몇 가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순수하게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는 종말단계 고고도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단계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 정점을 지나서 대기권을 지나서 하강하는 국면 이게 고도 40~150km 사이의 고고도, 종말단계 고고도라는 뜻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사드가 꼭 고고도 미사 일뿐만 아니라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고고도는 미사일의 궤적을 보고 말씀하는 고고도이고 미사일의 종류로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준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런 측면에서는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 3000 km급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명 위원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력은 우리는 비핵국가이니까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핵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미사일 전력 또 동맹의미사일 전력, 또 방어 전력은 마찬가지 한미동맹의 방어 전력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간 있었던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에, 말에 차이가 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들었는데 이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할 때 질문들이 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씩 어 떤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나게 답변을 하게 된 그 질문들이 다 똑 같은 질문이었나……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사드보다 공격무기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하고 저는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병법을 배우면서 배

웠습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승리 이후에 받 는…… 승리를 했더라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피해를 많이 입 고 나서 승리를 가지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 길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드가 배치된 곳이 어디 있 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괌에 있습니다.
- ○이종명 위원 유일하게 괌에 한 군데 있는 것 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종명 위원 괌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령입니다.
- ○이종명 위원 저도 괌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 데 괌은 우리나라 서울보다 조금 작은 땅덩어리 로 돼 있습니다. 평균 고도가 약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저지대로 돼 있고 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혼여행지나 휴양지로 굉장히 선호를 하는 곳이 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괌섬입 니다.

미국은 사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 치는 이런 레이더를 자국 국민 16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것도 아주 저 지대에, 이런 곳에 사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운용하고 있겠습니까? 미 국이 거기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 사드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유해한 무기가 아 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레이더 등 전자파가 운용되는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해당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기지 밖에 있는 일반 주민 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 리들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종명 위원**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거기에 패 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디 말씀이십니까?
- ○이종명 위원 광섬 말입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곾을 가 보지를 못했 는데 괌은 중요한 미국의 허브기지기 때문에 당 연히 방공자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명 위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충분히 자

기들 미군 기지들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북한 미사일 능력 의 신장과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명 위원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어트 미 사일로 방어할 수 있는 것 외에 몇 중으로 더 다 중ㆍ다층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를 배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예 로 들면 우리가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골키퍼가 있습니다. 골키퍼는 어떻게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골키퍼보다 훨씬 앞에 수비를 하는 수비수들 이 있습니다. 그 수비수들이 사드, 사드가 이 수 비수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만 의지를 하고 수비 수를 다 제거해 버리면 골키퍼 하나한테만 모든 수비를 맡기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 다. 특히 지역주민들 중에는 굉장히 생사를 걸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 에도 보면 국방부 출입기자들 풀을 형성해서 괌 기지에 현장 취재를 보내서 현장 상태를 한번 확 인하고 알려 주겠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또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 치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 는 분은 지역단체장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과 단체장들도 포함해서 괌섬에 가서 현장 확인 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방법도 좋은 생각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명 위원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시고 가 기는 힘들겠지만 지역이 결정되고 난 사후에라도 그분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라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을 모시고 괌섬에 가서 미국이 자국 국민들 16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렇게 사드를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 록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종명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우**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로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까지 사드를 실전배치한다고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중로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 보면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 이것 지금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충분한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급박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게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아까 장관님 말씀은 중국·러시아 이쪽이 사드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조가 크게 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느낌보다는 체감이 굉장히 클 것같이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쪽이. 장관님은 조금은 저희들보다는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내년이다 하는 선을 그어 놓고후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신가, 그것은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제가 주변국의 반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쪽에서의 반응은 반응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채널을 통해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고 이것은 이것대로의 우리 군사적 논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내년도가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것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라고 하는 그러한 대응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 이것을 결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미국의 예산 반영 등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계 획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 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 그리고 실무단 구성이 지금 대략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교부나 이런 데 다 와 있는 거예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 ○김중로 위원 그럼 왜 국방부에서 그것을 종합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작 때부터 이런 것 발표도 NSC가 해야 되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총리실이든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 주가 돼서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총리실의 국무조 정실이나 또 NSC는 각각 행정부의 또 외교안보 사안의 그러한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총괄조정의 틀 내에서 관련 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중로 위원 물론 장관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드 문제를 앞으로 이끌어 갈 텐데 대북 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 아니겠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관리위기 개념의,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이자 대북정책의 근본기조는 최악의 상황, 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중로 위원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고 전사에 나와 있어 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 ○김중로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 때도 상호 대화의 끈은 놓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대북 관계에서 정말 실낱같은 희망이 될 수있는 대화의 채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번 다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하 고 싶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정부 관계부처의 국무위원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중로 위원 아니, 국무위원 간의 얘기가 아 니라 대통령께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강경모드로 지금 가기 때문 에. 도망가는 쥐도 고양이 안 물겠어요, 나갈 데 없으면?
-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언론을 통 해서도 얘기가 전해지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런 말씀이 오갔다는 것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 ○김중로 위원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겠습니다.
- ○김중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 ○**이철희 위원** 좀 전에 김종대 위원 질의 때 환 경영향평가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에 들 어 있습니다.
- ○이철희 위원 어디 절차에 들어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게 부지를 공 여할 때 SOFA에 의해서 공여하는 부지에 대해 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 다.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입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 ○**이철희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철희 위원 맞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새로 제공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한다는 거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새로운 부지든지, 그것은 제가 더 확인……
-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 가를 하시겠다 그랬다는 말씀은 새로운 땅을 주 겠다는 거잖아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SOFA시설분과위 원회 과제로 채택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반드 시....
- ○이철희 위원 아니, 채택이 되면? 조건 있어 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게 시발입니다. SOFA시설분과위원회······
- ○위원장 김영우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영향평 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에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렇습니다.
- ○이철희 위원 합니까?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 ○이철희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지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아닙니다. 꼭 합 니다.
- ○이철희 위원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환노위에서 대답했는데 혹시 아십 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환경부장관의 발언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이철희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 할지 여부를 가지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적은 없으신 거지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SOFA 절차에 따 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한 바 는 제가 없습니다.
- ○이철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신 괌의 경 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했더군요, 두 차례나, 그 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 환경평가보고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0년도 것, 영향평 가보고도 2015년도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 ○**이철희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 저도 영문으로 된 내용은 대충 봤는데 번역해 서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분들 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불어서 환경영 향평가를 한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셔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침은 공개적으로 천 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 ○**이철희 위원** 또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의견청취' 조항입니다.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4조4항도 비슷한 내용인데 땅을 수용할 경우에는—요지는 이렇습니다—이해당사자와 해당 시·도지사랑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지를 정하 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거 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당장 확정발표해서 밀어붙이기 할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우리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법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해 보고 보고를 안 받았는 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그러한……

○이철희 위원 실무점검단에서 혹시 이 문제 검 토 안 하셨습니까, 정책실장님, 확정발표 전에 우 리 법에 주민의견 청취하게 돼 있는 것?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실무점검단에서 체크 안 하셨나 요, 이것?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뭐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체크하 셨는지 안 하셨는지?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저는 체크를 직접 못 했는데 그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혹시 참여하신 분 안 계신가요, 점검단에? 공동실무단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것을 저희는 철저히 법규 또 우리의 국내법규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그 문제는 좀 더 확인을 해 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발표를 최대한 미루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법의 절차에 의하면 의견 청취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 률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확정 발표해 놓고 요식행위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장관님, 이것은 책임지고 해 주 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괌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열 었습니다, 국방부가. 우리도 그 전례에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NSC 회의에서 국회 비준안, 요청 안 하기로 혹시 결정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결정은 NSC에서 없었고요. 이 자체가 저희들은 국회의 비준 사항이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 판단은 국방부 판단인 거지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NSC에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 가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내용들이 발견이 되면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디에 요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이 밝혀지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만약에 이것이 국회 동의 를 요청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다 면……

O이철희 위원 국회 전례, 헌법이나 법이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땅을 제공할 때나 새로운 돈을 제공할 때, 방위의 분담금, 협상금 말고 새로운 돈을 제공할 때는 국회의 비준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 규정도 그렇고요. 그랬을 경우에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것을 검토해 오면서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가 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안 그래도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 해 주시고요.

혹시 비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법제처나 이 런 데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법제처 유권해 석 받았어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을 주셨는 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희 내부 법적 검토에서 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 ○**이철희 위원** 법제처 검토는 안 받으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법제처하고도 의견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 ○**이철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거쳤다는 말씀이 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 김영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경대수 위원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아까 장관 님 답변하시는 게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다 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기왕에 미군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더라 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건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하고 또 반환받을 때 우리는 지금 현 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경대수 위원 이미 공여된 기지 내에 설치할 때도 필요한……
-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공여된 것은 이미 환경영 향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할 필요 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국내법에 따라 서 필요한 경우에는 받겠다 이런 취지지요, 반드 시 다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요. 법이 한다고 하 면 저희는 해야지요. 그런 뜻입니다.
- ○경대수 위원 국회 동의 부분도 법이 필요하다 고 그러면 하는 거지.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기본적으로······

- ○**경대수 위원**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 안 하신다 는 취지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 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검토를 그렇게 받았습 니다.
- ○경대수 위원 공동실무단의 구성원 중에 국방 부 말고 다른 부처도 구성원으로 돼 있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드 배치에 관한 판단은 순 수하게 군사적으로 우리 방어용으로 필요하냐 여 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설치하기로, 배치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한 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기 다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있 는 거니까 외교부가 주변국가의 관계도 있고 해 서 있는 것이지, 이것은 철저히 군사적 관점으로 하는 거지요.
- ○경대수 위원 저도 생각에 이것은 순수하게 우 리가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데 필요하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랬었길 바라는 취지 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실무 단이 후보지를 빨리,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고 여기 보고서에 돼 있는데 지금 운영결과보고서가 작성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경대수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최대한도로 당 겨서 빨리 발표를 하는 게 국내적으로 국민들 간 의 갈등을, 가급적이면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 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단이 군사적인 판단에 따라서 운영결과보고 서를 작성해서 장관께 건의를 하면 그것은 100%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장관께서 건의된 내용과 달 리 결정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이 그것을 달리 결정 해야 할, 저는 100% 그대로 하는 것에 아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실무 단의 건의를.....
- ○**경대수 위원** 실무단의 보고서대로 결정할 거 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위원** 7월 8일 11시에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병기 위원** 11시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11시입니다.
- ○김병기 위원 장관님께서는 국방부 소속 장교, 이 업무와 관계되는 장교가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할 때 근무지를 이탈해서 개인사적인 일을 보다 가 적발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업무와 직접적인······
- ○김병기 위원 직접 관련 있는 장교가.
- ○국방부장관 한민구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위를 좀 알아보고 그 경위에 따라서……
- ○김병기 위원 부적절한 처사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경위에 따라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 ○김병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윤병세 장관은 워커홀릭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발생해도 퇴근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밤을 새는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아주 유명한 장관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쇼핑을 했는데 혹시그날 발표가 11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이었는데, 최초에는 다른 시간이었는데 11시로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시간이 11시였던 겁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최초에 15시에 계획을 했습니다.
-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을 고려해서 좀 당겨서 하는 것이 필요해서 11시에 하고 각 당에 가서 저희들이 보 고드리는 것도 시간조정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 다.
- ○김병기 위원 그게 혹시 소통 부재로 윤병세 장관, 그 직접적인 업무 관련이 있는 외교부장관 한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든 통보가 안 된 건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윤 장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그 전날 저희 NSC 회의를 했는데 거기를 이분이 급하게 오다가 넘어져서 옷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옆에서 확인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외교부장관이 발표시간에 맞추어 서 자기가 특별히 무슨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런 다른……

- ○김병기 위원 몰라서 갔던 것 아닐까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최초에는 다른 시간이었는데 11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발표가?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병기 위원 다른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평시와 전시의 작전권 권한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저희 환경상 평시와 전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소위 작전계획이나 예규에 평시에서전시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이때부터 전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 ○김병기 위원 그때도 작전권 권한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평시에는 우리 한국연합사에 있다가 미군 공군 사령관한테로 바뀌는데 명확하게매뉴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 ○김병기 위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미사일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아까도 제가 특정 상황을 가상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평시 상태인데 갑자기 미사일 한 발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 인했다면 그것을 전시로 볼 거냐, 평시로 볼 거 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병기 위원 그렇습니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전시 선포가 안 되고 도치해야 될 상황이, 틀림없이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주도하고 미 7공군 사령관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 에서 방공작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 변을 드렸습니다.
- ○김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장관님, 7월 7일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그 NSC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셨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NSC는 상임위원장이 주 관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참석 안 하십니다.
- ○김동철 위원 안 하셨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동철 위원 그때 그 NSC에서 외교부장관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발언하 셨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각 장관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를 했는데 NSC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각 장관들의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 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철 위원 장관님께서도 군사적 유용성은 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 니다.
- ○김동철 위원 아무튼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 한 거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국방부가 공동실무 단을 운영한 결과로서 부지의 가용성 또 군사적 효용성을 판단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 것입니다.
- ○김동철 위원 아무튼 이 사드 배치의 전격적인 결정에 대해서 국민도 국회도 전혀 몰랐지만 우 리 장관께서도, 국무총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 던 그런 결정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상하지 못했다는 결정…… ○김동철 위원 시기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 될지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모르셨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에서 저의 답변과 관 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들이 움직임은 다 감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

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정부는, 국방부는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방어용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이것을 사드는 그냥 요격 무기체계로서의 사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데 여기에 전략적 의미를 매우 높게 부여해서 중 국과 러시아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에 대해서만 운용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마음먹기 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 사일 탐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레이더를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데 소위 사격 통제용 TM 레이더는 그렇게 딱 그 용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 다.
- ○김동철 위원 아니, 시간이 짧으니까 제 질문 에 대해서만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동철 위원 아무튼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일단 오해라고 하겠습니다-오해를 하는 거겠지 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것 말고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철 위원 아무튼 중국, 러시아 군사당국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 ○김동철 위원 설득을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사드와 관련된 한중 간의 채널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 개인만 하더라도 제가 한 2년 재직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 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있다고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동철 위원 말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중국을 설득 못 하신 것이잖아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이것을 중국에 꼭 설 득해야 될 과제냐? 저는 설득이라는 용어는 적절

치 않다고 보고 다만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면……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중국이 설득대상이 아니다, 설득되면 좋지만 아 무튼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군사적으로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의 답변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국의 정책이 군사적인 측면만을 보고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 정부에 미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더 크게 본다면 동북아 안보질서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까지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NSC에서 결정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본 위원의 경험에 따르면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회의를 거쳐서 많이 조정하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 ○백승주 위원 조정회의를 통해서 다른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들을 죽 거치는데 사드문제 도 그런 방식의 예외가 아니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 ○백승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 통수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많은 부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되었다 이렇게 보 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건의하고 승인된 것입니다.
- ○백승주 위원 장관님께서 오늘 답변 중에…… 답변자료에도 보면 사드가 도입되면 우리 대한민

국 면적의 3분의 2 내지 2분의 1 정도가 사드로 써 보호받을 수 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연구결과는 어 디서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우리 관계 연구기 관에서 한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이런 연구결과의 인용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 한두 개만하면 킬체인, KAMD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검증이 있은 후에이런 통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드가 없어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는 데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 라고 봅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일본에도 지금 사드 관련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괌에 설치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우리한테 설치된 사드에 대한 제3국들의 군사적반응에 대해서 잘 납득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SOFA 규정에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철저히 진행됐다고, 사드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SOFA 규정에 따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그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고 그 대답은유효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불필요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사드 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전 운용 또 효용성, 피저빌리티(feasibility)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미 환경이 되어 버렸던…… 인문 지리적 환경, 걱정하는 사람이 좀 적은 지역을 선정하는데, 인문 지리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사 지리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작전성 검토

도 중요하지만 인문 지리적인 이런 환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도 고려해서 최종 부지를 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그런 것들이 자연스 럽게 고려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백승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 씀하셨는데 언론상황을 고려해서 15시에 예정되 었던 것을 11시로 했다고 했는데 그 언론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엠바고를 요청하고 그것을 수락해서 15시로 정해서 하였는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시에 하였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유사 한 것이 있으면 리스크 밸류(risk value)를 하고 언론상황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 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여러 가 지 국회 사정들도 있고 정무적으로 판단할 요소 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특정 언론만 고려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변경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비 슷한 사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 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 습니다.

○백승주 위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사드가 필요할 때는 구매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매를 검토한 적이 전 혀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백승주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 확한 입장을 유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가 듣기로는 새로운 사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 매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 렸고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고……

○백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정정을 해야 됩니 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구매할 생각이 전 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장기 계획에 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가 몇 차례 그렇게 다 른 데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백승주 위원 세부 운용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세부 운용절차를 논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된, 동료 위원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세부 운용절차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 위원님 답변 중에 우리의 연구기 관의 연구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미가 공동으 로 한 결과입니다.

○백승주 위원 그 연구기관은 알고 있습니다. 신뢰도 부분을 다시 평가해서 인용할 때 조심해 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문에 '7월 7일 날 NSC 회의에서 그동안에 국방부 공동실무단 의 검토결과를 갖고 NSC에서 배치를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제가 뭐라고 답변드 렸느냐면 공동실무단에서 소위 배치할 부지의 가 용성과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확인했 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은 배치를 결 정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장관님께서 대정부질문 7월 5일 날 당시에 공동실무단의 검토결과를 아직도 본인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결과 보고서를……

이 보고 못 받으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 는데 NSC는 어떻게 그 결과를 보고받고 결정을 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제가 이 공동실무 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보고사항을 받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김종대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에서 답변드린 것은 그날 그 위원님께서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종대 위원 아니, 자꾸 그 얘기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장관님이 아직도 결정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한 근거로 '공동실무단의 검토결과를 저도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지만 의미한 것이라고 듣질 않았단말이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혼선이 초래된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제가 좀 더, 다시 한 번 정확히 속기록을 확인하고……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추가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되겠고 아까 질문 중에 미 국방부 시험평가 하고 2016년 1월 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됐어요. 이것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미 사드 운용체계에 있어 가지고 운용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된 다는 보고서예요. 이 부분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중요한 문서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요. 한 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면 운용의 책임이 주한미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 사드가 한반도에서 효용이 높아지는 겁니 다. 효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관심사항이잖아 요, 이게.

여기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데, 그럴 위험이 있는데 미 국방예산에 사드 배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되 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아직은…… 우리와 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 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무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실무단에서 검토 안 하고 뭘 하겠어요? 중요한 의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검토했으리라고 보는 데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사 드는 1개 포대가 6개 발사대에 48기가 발사됩니다.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8발.
- **○김종대 위원** 예, 48발.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종대 위원** 그러면 1차 발포를 하고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재장전 시간이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30분입니다.
- ○김종대 위원 30분이지요? 그러면 48발로 요격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여러 가지 투발수단을 갖고 있는데 또다른 전투 준비태세를 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논리적 함정이 뭐냐 하면 사드 1개 포대가 대한민국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커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번의 요격기회에서의 얘기고 북한이 미사일을 일제 사격을 한다거나 다량으로 사격을 했을 때 또 재장전을 하고 걸릴 때는…… 이 시간이 긴박할 때 커버할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퀀스(sequence)지 무슨 기준으로 2분의 1, 3분의 1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연속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커버하는 범위가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방어범위는 그 능력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은 운용하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1000발이 일제히 넘어오도록 우리 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걸프전 때사담 후세인이 스커드 미사일을 일제 사격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세 발, 많을 때 다섯 발 했단 말입니다. 이걸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성능으로 보는 것은 일단 제한된 상황이고 만약에 후세인이 수백 발을 일제 사격했던가 하면 그 패트리어트의 효용성은 달라지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이 럴 때는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논리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 기체계의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거듭 말씀드리 지만 그것의 기본능력, 제원을 기초로 해서 얘기 를 하는 것이고 운용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이 런 말씀하면……

○김종대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국민들 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논리고, 그다음에 딱 한 가지 다-----

○**위원장 김영우** 보충 질의 또 안 하십니까? 그 러면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는 TV 보는 분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 ○이종명 위원 예.
- ○위원장 김영우 그러면 1차로 추가질의가 끝났 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그러면 먼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 ○김진표 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 ○위원장 김영우 예.

○김진표 위원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한 반도 방위무기로서 사드가 실효성이 적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2013년 6월에 미국 의회조사국이 이런 이야 기를 했는데 아마 장관께서도 이 보고서 읽으셨 을 겁니다.

'한국은 북한에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오고 수분 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탄 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 교 란용 미사일 수십 발을 함께 쏘거나 다탄두미사 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일일이 식별해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북 의 핵ㆍ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 템 구축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를 도입하 는 것보다 훨씬 더 긴요하다.'이 보고서 읽어 보 셨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진표 위원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말씀 해 보시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반도 전역이라고 하면 그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낮은 궤도로 와서 제 한된다고 보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커버가 다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MD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고요.

우리가 요격자산을 확보하는 외에 킬체인이 아 주 중요하다고 보고 적의 미사일 전력을 가장 빠 른 시간 내에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노 력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진표 위원 킬체인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자산을 그때그때 잘 제공받고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김진표 위원 그런데 킬체인 시스템을 운용하 는 정보 중에 미국에서 제공받는 정보가 많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에서 제공받는 정 보…… 예, 당연히 많습니다.
- ○김진표 위원 그러고, 지금 사드를 우리가 만 일 배치하게 되면 그 사드는 우리 KAMD 체계 속에 편입이 됩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KAMD는 우리 한국이 독 자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고 사드는 주한미군 자산인데 운용에서는 같이 협조된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김진표 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문에서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 사드가 10여 차례의 실험 에서 명중률이 높았다 하는 요지로 그 효용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에서 120° 라고 하는 소위 X밴드 레이더 그 후면이나 측면 에서는 측정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옮길 때 그 X밴드 레이더 발사각 을 조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SLBM 때문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하나 더 도입 하려고 하는 계획을 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은 사격 통제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 렇게 다중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2015년 2월에 미국 군사일간지 디펜스 데일리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서면진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비행실험과 신뢰성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못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이것을 견뎌 내는 실험에 대해서는 많은 결함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양반이 걱정한 것은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연계 운용해서만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험이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연계 운용하는 상태에서 성능을 실험해 본 적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는 한 열한 차례의 요격시험이 성공했는데 그것이 다른 시스 템과 연계해서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 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KAMD 체계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 우리 KAMD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드가 각각 다른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 이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저는 그것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도 한미가 가지고 있는 요격자산을 공동의 작전운용절차를 통해서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용하 는 것입니다. 사드체계가 오면 같은 맥락에서, 작 전운용절차가 사드를 위해서 좀 더 발전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하면 이 미사일을 통제하는, 한미가 각각 운용하는 그 통제소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결국은 사드 미사일…… 요격 미사일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적의 표적이 자기에게 할당되면 그 할당된 표적을 추적해서 탄두를 식별해서 요격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연동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김영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부담을 드려서 죄 송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백 승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번 경우에 비춰 봤을 때 공동실무단에서 작업이 끝나면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차관회의를 거쳐서 이견을 다 조정한 후에 NSC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통상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장관님이 연말쯤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게 정상적인 스케줄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7월 7일 결정으로 앞당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NSC 회의에서 찬반토론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답을 주셨는데 대개는 그런 게 필요 없지요, 이미 다 조정해서 올라가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걸 앞당겼을까라는 게 궁금한 건데 질문을 드려도 답을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제 나름대로 답을찾아보겠고요.

어쨌든 제 판단대로 이게 앞당겨진 것이라면, 기왕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차질 없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 행하려면 국방부장관님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 내고, 국방이라는 게 국민들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강 한 군대가 되고 강한 안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각자 자기 지역에 오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는 이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 리더십을 행 사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정책실장님이 최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만 논란이 점점 커질 수 있으니 장 관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 이 문제를 해명하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자 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건의를 하 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도 대통령께서 이 문 제를 어디까지 관여해서 말씀하실 사항인지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이철희 위원**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 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말씀드리고요.
- ○이철희 위원 없으십니까, 의향이?
-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이철희 위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의를 하 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 ○**이철희 위원** 이것 하나는 궁금증입니다.

사드 배치 운용비용 그러면서 1조 5000억 얘기 하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운용비용이 1조 5000이 아 니고……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드라는 무기를, 포대를 생산하는 비용입니까, 1조 5000억 0]?

○국방부장관 한민구 1조 5000이 말하자면 생산 비용입니다, 탄약과 미사일까지 합친.

- **○이철희 위원** 생산비용이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생산비용이고······
- ○이철희 위원 그게 1조 5000억이고 이게 우리 나라에 와서 배치가 되면 운용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 ○**이철희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듭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운용비용은 저희들이 한 번 도 저희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 관심을 안 갖 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그런데 주한미군이 대개 자기들이 운영해 보니 운용비용이 대체로 얼마나 들더라 이런 것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한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이 좀 들 것 같 아서, 이건 우려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 이기도 한데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방위

비 분담금 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이미 맺었잖아 요. 그렇지요? 2018년까지 맺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18년도까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혹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까 미국이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분명하게 그런 요구에 는, 설사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이 비용이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상식으로, 군사상식으로 보 면 완성된 무기체계가 전개돼서 운용을 하는데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것이고 또 고장이 나면 고친다든지 정비, 수준 유지하는 그 정도의 비용이라서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 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 고요. 인건비도 들겠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 기 준으로 사드포대 운용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끝으로요. 장관님께서 사드 배치 결정이 오직 군사안보적 대응이다. 그런 쪽으로 만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 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사무기에 의존하는 안보 는 실패한다고 보고요. 순수 군사안보적 대응이 라고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야지요. 북한 이 핵무기 하는데 우리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핵무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일국의 국방정 책을 입안하는 전략가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면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나 내용을 가지시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연말이라고 하는 것과 답변과 관련 해서 빨리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들이 복안은 있어도 이것을 외부로 발표드리는 것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언제쯤 되니, 연말에 는 되니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찬반토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에 반대하 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각 분야에서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 니다.

저는 여기 국방위에 와서 또 평소에 대정부질 문 통해서 장관님 답변 들으면서 사실관계를 왜 곡하지 않고 소신껏 참 답변을 잘하신다는 생각 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공동실무단 운영 서면보고만 안 받았지 계속해서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보고받은 거지 그게 왜 서면보고만 보고입니까? 지금 다 그런 보고를 통해서 NSC에 그게 올라가 가지고서 NSC에서 7월 7일 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 돌리시기 하는 답변들은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께서 소신껏 말씀하셨어요. 중국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이건 한반도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 야기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방부장관이지만 그 러나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에 미칠 외교적 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해도 된 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에 지금 수출을 26% 하고 있어요. 수출의 26%가 중국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400억 불이에요. 1000원으로 계산하면 140조지요.

자, 600만 중국관광객이 있습니다. 2만 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케이팝, 한류도 다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건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를 허가했습니다.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2롯데월드를 허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제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자, 박근혜 대통령, 틈만 나면 국회를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법 통과 안 시킨다고. 이것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법 통과 안 시킨다고. 그런데 그것 따져 봐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것 2만 명 고용한다 그러는데단 50명 고용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막 여론을 호도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을 제가 설득시켜야 된다고 말씀드 렸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설득이 안 됐을 때, 어 떻게 해도 설득이 안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을 때 그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인 역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운·조선만 가지고도 지역경제가 난리잖 아요, 부산·울산·경남·전남 할 것 없이 말이 지요. 그런데 중국 문제가 정말 현실화됐을 때 그것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무슨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이랄지 또는 무슨 일부 지역의 반대, 그런 것은 정말 국 가 안보적으로 필요하다면 다 그것 설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 지 못하면, 저는 장관님과는 전혀 다르게 설득하 지 못한다면 말이지요, 해서는 안 됩니다. 설득한 다면 하세요, 군사적으로. 그러나 설득 못 하면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 국으로부터 받을 제재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중국을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국민의 동의를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한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철희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사드 배치를 설득하려고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 사태의 추이를 봐 가면서 도저히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의최고 통수권자로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될 때 나서야지 지금 당장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아까 김종대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국방부장관

이 단지 군사적인 것 또는 작전적 수준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다. 국가정책 · 전략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김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취지인 것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이 우리 국가의 어떤 생존, 분명하고 명백한 위협인 북핵 ·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능력 강화라는 측면 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의 입장에서 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 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이 있으리라 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결 정을 어떤 중국의 또는 기타 나라의 그러한 무슨 반발이라든지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가 주저해야 될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위원 님께서 중국의 제재라든지, 이 제재가 외교적・ 군사적 · 경제적 · 문화적, 여러 다차원적인 제재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드시 꼭 그 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측 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안보를 위해서 한 조치가 그런 문제에도 이렇게 가지 않 도록 우리의 아주 단합된 의지의 표현, 이런 것 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중에 토론하시지요.

○위원장 김영우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오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 다. 그런데 여기서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서 제대 로 알고 준비를 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조금 확 인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장관님 말씀 중에 모 호하기 짝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기한 것은 사드 운영비에 있어 가 지고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물론 미국 내부 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운영비에 들

어올 때 1조 5000억 들어 가지고 들어왔으면 발 생비용이라 봤자 수리비하고 전기세, 이런 것 아 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리비와 전기세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건 상 식적으로 첨단무기 아닙니까? 고도의 정보체계가 실려 있고 이런 무기일수록 운영유지비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지 이런 게 항상 우리 관 심사항인데 그 정도의 어떤 수리비, 전기세, 아니 면 도로 하나 깔아 주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또 성능개량 안 할 겁니까?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군이 책임지고 할 문제지 우 리한테 비용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한번 지켜보고 그 답변은 계속 기억하겠습 니다.

그다음에 김진표 위원님 질문 때도 타 무기체 계와 연동 문제에 대해 질문하시면 답변을 안 하 세요. 그냥 '열한 번 실험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문서를 하 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미 국방부 시험평가 보고서에 나왔는데 올해 나온 버전입니다.

여기 373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전 방 혹은 후방 배치 X밴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탄 도미사일 위협 데이터는 미 본토 위에 위치한 지 휘통제전투관리본부—C2BMC라고 하는 것—이것 을 통해 미국의 전 지구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에 제공된다"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X밴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데이터 라 하더라도 미국의 다른 자산하고 통합해 범지 구적 네트워크 속에 들어간다고 의미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드가 주한미 군 내에서만 사용되는 무기체계인가, 아니면 한 반도 전구를 넘어 가지고 미국의 MD망하고 연 결되는 가운데서 글로벌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미국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파악된 게 없다고 답변하시렵니까? 어떻게 보십 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좀…… 김 위원님은 자꾸 이 사드를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정보의 공유하고 또 요격의 제한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 달라는 뜻이지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사드가 주한미군 내에서 여기서 무기체계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외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라면…… 그래서 제가 자꾸 명령권자가 누구냐, 운용개념이 뭐냐, 상임위 첫 날부터수도 없이 여쭙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제가 김 위원님 질문에 답하면서도 제가 참 아쉽게 느끼는 것은 명령권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답이에요. 주한 미7공군사령관이 운영한다는 게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의 기본이기 때문에위원님께서 왜 그 답변을 이해를 못 하시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대 위원 아니, 운용개념이 여기에서 어떤 명령권자가 있고 운영절차가 있고 이렇다면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할 수 있는 거 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한반도로 향하는 건지 일본으로 향하는 건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은 조기경보레이더가 판단해서 큐잉(queuing)정보를 주면 사격통제용 레이더가 확인하고 우리로 오는 건지를 확인해서 요격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 때 그런 조기경보체제는 한 미일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가 연합방위 차원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한미가 공유하는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일미군도 조기경보시스템이 같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주일미군을 또 거 기까지 연계시키지는 마시고요, 우리 한미 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동 공유하는 플랫폼 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일은 없다? 없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요. 한미일은 우리 가 TISA사에 의해서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하 기로만 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밖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8시12분)

○위원장 김영우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위원 님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 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결산 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서 위원장과 3당 간사 간 합 의를 통해 2015회계연도 결산을 추가하여 상정하 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위원장 김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 병무청 ·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이신 이철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철 희 위원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 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작전근무지원단 항공의무전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예산의 재이월이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의무시설 개선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 고 시공업체에 과오 지급된 부당이익을 반환받도 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발생 한 토지매각수입은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기부대양 여 사업방식을 통한 군 골프장 신축을 지양하도 록 하고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이 군인복지 기본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 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 니다.

4건의 시정, 25건의 주의, 21건의 제도개선 등 총 5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 안대로 승인하되 국방부에 육군 병영생활관의 실 태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의 2017 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의결 전까지 국방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방부에서 설치·운영 중인 TF, 군 관사 운영실태, 노후된 병영생활관 내 취사식당 개보수, 마트 점장 포상금 지급 및 군 골프장 운 영 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군사문제연구원 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임차 료 및 관리비의 과다지급건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담당자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변상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교육기간 내 교육 실시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교 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교육계획 등을 합 리적으로 수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투ㆍ기술 분야 유급지원병은 모집실적 대비 군복무실적이 저조하므로 국방부와 병무청 은 유급지원병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모집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

선을 요구하는 등 변상 및 징계 각각 1건,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17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국방부로 하여금 유급지원병제도의 개선안을 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과 관련하여 미 정부의 FRB계좌로부터 자금이체 시 그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시정 요 구하였고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과 관련하여 전 력화 이후 전력운영유지 단계에서 획득하는 수리 부속은 전력운영비로 조달토록 주의를 요구하였 으며 긴급소요추진사업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소요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2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국방부, 기획재정부, 합 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범정부 차원에서 방위력 개선 부문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소요결정부터 예산집행까지 의 연계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 여 국정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이철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 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 해 실시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무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세부적인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의결하면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심 사결과들을 단순히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 근 국민들께서 국방예산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는 쇄신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견제 구조를 넘어서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켜 내기 위한 상호 협치의 과정으로 인식해 주 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 처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훈련장시설사업에 대한 예산통제 문제, 국회 중 액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 쳐 진심어린 충고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방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소위에서 지적되었던 한 시조직, 즉 TF 과다 문제는 금년 중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운영 중인 TF는 최대한 정규조직 으로 흡수하고 기타 한시조직 중 긴급한 군사 및 행정 수요가 크지 않은 조직은 폐지하는 방향으 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조직의 증가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 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역량 강화 등 17건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 불용 축소 및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등 청예산 운용뿐만 아니라 긴급소요대상사업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안 등 총 업무전반에 걸쳐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셨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시하여 주 신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향후 청 업무 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력개선 예산이 더욱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 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향후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또 국민의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도입하겠다던 사드 배치로 인 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지역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을 향해 충분한 설득과 또 이 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사드 결정 추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 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경 대 수 김 동 철 김 병 기 김 영 우 김 종 대 김 중 로 김 진 표 김 학 용 백 승 주 우 상 호 이 종 걸 이 종 명 이 철 규 이 철 희 정 진 석 진 옂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석 호 성 전 문 원 위 워 권 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곾 한 민 구 종 기획조정실장 황 회 국 방 정 책 실 장 류 제 승 기 획 관 리 관 0] 우 남 법무관리관 임 천 영 정책기획관 수 장 경 국 제 정 책 관 순 구 윤 함 동 참 모 본 부 전 략 정 보 부 장 김 선 욱

병 무 청 장 박 창 명 방 위 사 업 청 장 장 명 진